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의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9(24-5) | 2024. 5. 1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
나태중

군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개선방향
박상중

본격 시동을 건 북한의 우주개발과 그 의미
장광열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

나태중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충남대/한밭대 교수 및 안보학교수)

국가보훈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국가보훈제도가 제대로 정립되고 공평무사하게 시행될수록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애국심이 배가되어 위협을 무릅쓰고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희생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투에 임하는 장병으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자신을 대신하여 가족을 돌봐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제도가 정립되고 뿌리내린 국가의 군대는 그만큼 사기가 충천하고 강한 전투력을 구비하여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 강군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의 30-50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제고된 국가위상에 걸맞게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제대군인과 관련된 3개 과제는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로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이다.”,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을 피력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호국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다.

군 복무 여건의 실상과 최근의 추세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업으로서의 군 생활은 계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일반직장에 근무하는 개념과 달리 국가를 위한 충성과 헌신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복무」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개인)은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고용주)에게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월급으로 받지만, 군인에게는 사용자인 국가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군 복무의 특성상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읍·면 단위 이하의 격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 1년 또는 2년 단위의 보직 교체로 인해 빈번한 이사가 불가피하고,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제대별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또는 핵심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준비태세 강화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계급별 정원에 따른 인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군 조직에서 차기 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 마련과 자녀교육 및 결혼비용 등의 소요에 따른 경제적 지출이 최고로 많은 시기에 「군 인사법」에 명시된 연령별 정년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가운데 영관급 장교의 경우 소령 계급은 2024년 1월부터 45세에서 50세로 정년을 연장하여 적용할 예정이고, 중령과 대령 계급은 각각 53세와 56세에 계급 또는 연령 정년으로 전역을 해야 한다. 준사관은 55세, 부사관의 경우 상사 계급은 53세, 원사 계급은 56세에 전역을 해야 하는데, 개인별 복무연한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앞서 살펴본 내용이

주로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 해당되고, 중기복무와 복무연장(10년 이하 복무) 제대군인들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병의 복무기간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초급간부들의 복무기간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 선진국의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과 시사점

제대군인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계급별 정원에 따른 인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군 조직에서 차기 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군 인사법」에 명시된 연령별 정년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역을 해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군 조직의 특성상 매년 7,000여명에 달하는 제대군인들이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기에 전역하여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생애주기로 볼 때 이 시기는 본인의 주택 마련과 자녀의 교육비용 등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제대군인의 경우 신입사원이 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경력직으로 입사하기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희망하지만, 일반 사회생활과 전혀 다른 특수한 여건에서 경험한 직책별 경력을 취업과 연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2023년 9월 4일 KBS 9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66%에 그치고 있는데, 취업자 중에서도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전역예정 군인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에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군사선진국인 미국은 국방부에서 군 복무기간 중인 간부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제대군인부에서는 제대군인의료처, 제대군인보상처, 국립묘지관리처 등의 행정부처를 통해 제대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들이 순조롭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군 경력과 교육훈련이 통용될 수 있도록 인증도를 적용하는 등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제대군인을 최고로 예우하고 있다. 그 결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94%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방부 산하의 제대군인청에서 제대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보상 등의 지원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사회는 국방부를 대표하여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민간기관 간에 직업전환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군 특기 교육과정 중 민간직업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하의 연방군 행정청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전직지원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전직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극소수 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대군인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강화의 필요성

국가 차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제대군인의 재취업이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와 계급구조의 특성, 일반사회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대군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역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전직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국가와 군 전직지원 교육기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산업분야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적용한 전직지원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체계적인 전직지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인 기관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제대군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취업에 필요한 경력관리에 전직지원 정책의 주안을 두어야 한다. 제대군인의 취업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제대군인 본인이 민간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창출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지만, 실제 취업현장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구비한 제대군인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취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직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군사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가운데 한국적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제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군과 유관기관에서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게 하고, 장차 우리 군의 주역이 될 우수한 젊은이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개선방향

박 상 중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국방대학교 교수)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군 마약사범 입건 현황도 최근 5년간 총 1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군대는 특수한 복무환경, 상시 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훈련 등으로 긴장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직업군으로 마약류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다. 군 마약범죄 유형은 용사가 택배로 대마초를 구매하여 병영에서 나눠 피우고, 간부가 대마 종자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부대 근처에서 재배하거나, 휴가 장병이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다양하다. 군내 마약류 오남용은 장병 개인의 건강과 전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군사대비태세(Military Readiness Posture)와 전우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약은 사후관리보다 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국방부는 작년 5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내 마약류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군인사법(제10조2의2), 병역법(제14조의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8조의3) 등 3개의 법령을 개정하여 마약 중독자는 임관 배제, 입영대상자의 적격판정, 군인의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 검사 등을 법제화하였다. 모든 국방인력(군인, 군무원, 민간인력 등)을 대상으로 상시 마약류 검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이 글에서는 ‘군 마약범죄 퇴치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군내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훈령·지침 제정

미군은 입대지원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검사를 시행하여 약 1%를 탈락시키고 있고, 모든 국방인력에 대해 무작위 마약검사를 실시하여 사법처리, 강제제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군은 약물수요감소프로그램(Drug Demand Reduction Program, DDRP)과 관련하여 4개의 훈령/지침(Directive/Instruction)을 적용하고 있다.¹⁾

1) ① 국방성 훈령(Directives) 1010.4: 국방성 직원의 약물과 알코올 남용에 대한 규정

DDRP는 채용 전 검사, 의무적인 무작위 검사, 마약류 위해성과 마약 사용 반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군의 마약 양성률은 1987년 3.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 이후 0.8%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DDRP 운용성과를 고려하면, 한국군도 법에 기반 한 군내 마약범죄 퇴치를 위해 정책과 훈령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약검사의 목적·책임·적용범위·역할, 마약예방사업, 마약검사절차, 검사기관의 조건, 검체(소변 등) 종류, 검사기관의 조직구성·인원·능력·역할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검사할 마약류 종류, 검사 대상자, 검사 주기 설정

국방인력에 대해 검사할 마약류 종류와 검사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터넷과 국제물류체계의 발달, 신종 마약성분의 개발, 항공운송 발달에 따른 시간·지리·공간적 근접성 등으로 검사할 마약 종류를 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군 마약사범으로부터 검출되고 있는 마약류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 벤조디아제핀류, GHB, LSD 등으로 민간에서 유행하는 마약류와 유사하다. 참고로 미군은 마약류 검사항목을 과거 대마, 코카인 등 13종에서 2017년 이후 헤로인, 코데인, 몰핀 등 26종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마약검사체계는 유행하는 마약류를 우선 검사하고, 신종마약류를 추가 검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방부는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²⁾와 협업을 강화하여 마약류 검사 종류 선정, 실험실과 전문인력 운영방안 마련,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내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검사 대상자 범위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한국군의 마약검사 대상자는 군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 장기복무지원자와 입영대상자로 군무원과 민간인력은 누락되어 있다. 반면에 미군은 마약검사 대상자로 군인과 민간인력³⁾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도 마약검사 대상자를 군인과 입영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방에 종사하는 군무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병역특례/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 의사/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사회복지요원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마약검사 주기를 군인에 한하여 매년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군은 모든 국방인력이 3년에 1회는 무작위(Random) 마약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② 국방성 지침(Instruction) 1010.01 및 ③ 1010.09: 군인과 민간인력에 대한 약물남용과 검사 프로그램 규정

④ 국방성 지침(Instruction) 1010.16: 군 약물남용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절차 규정,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보장하는 실험실 운용, 분석검사항목 최소 선정, 검사 Cutoff 농도와 요구사항 기록, 실험실 품질보증 인증, 인증취소와 재인증 등

2)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840호, 2023.3.15., 일부개정]

3) 연방공무원, 연방정부계약자(Contractor)와 보조금수혜자(Grantee), 안전과 보안에 민감한 국방부·교통부·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 기업 등

있다. 무작위 검사는 심리적·실천적 예방효과 달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한국군의 신분별 마약검사 주기는, 입대 용사는 병역신체 검사시 1회, 제대전 1회를 실시하고, 직업군인과 군무원은 임용시 1회 검사한 후 3년에 1회 무작위 검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또한, 임관 및 장기복무지원자는 선발시기에 반드시 1회 마약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예산이 가용할 경우, 모든 국방인력에 대해 매년 1회 마약검사를 실시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 될 것이다.

K-DDRP(한국형 국방마약검사센터) 및 통합마약관리체계 구축

군내 마약검사는 모든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은 통합된 마약검사 기관이 없어서, 입영대상자는 병무청(예비시험), 임관 및 장기복무지원자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예비시험과 확인시험)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군은 펜타곤에 DDRP 본부를 설치하고 본토에 7개의 마약검사 실험실(육군 2, 해군/해병대 3, 공군 2)⁴⁾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도 마약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법과학 실험실의 마약검사, 후속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미군의 DDR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K-DDRP(Korea-Drug Demand Reduction Program, 가칭 한국형 국방마약검사센터)와 ISO/IEC 17025 국제인증 마약분석센터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군의 특수한 복무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마약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훈령·지침 제정기관(국방부 보건정책과), 법과학적 마약검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방정책연구주관기관(국방대학교 등), 군인건강관리기관(국군의무사령부) 등을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군의 DDRP 현장방문, 공동연구,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군의 선진기술과 Know-how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유익한 방안이다.

나가면서

앞에서 군내 마약류 검사와 관리를 위한 정책·훈령·지침 제정, 검사할 마약류 종류, 검사 대상자, 검사 주기 설정, K-DDRP(한국형 국방마약검사센터) 및 통합마약검사체계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마약검사 결과의 관리, 관련기관 통보,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종합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정책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군내 마약류 검사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한국군은 마약 범죄 없는 청정 환경에서 선진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중에서 2개 실험실(육군, 공군)은 법과학적 마약검사 실험실로 운영하고 있다.

본격 시동을 건 북한의 우주개발과 그 의미

장 광 열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우주개발 경쟁

4차 산업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현재 전 세계는 자국의 생존을 위한 국방 분야에 미래 첨단 과학을 적극 접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야 중 하나가 우주에 대한 군사적 활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에 대한 관심에 자극받아 공격적인 우주전략을 구사하며, 기존 공군의 우주사령부를 모체로 하여 우주군이라는 별도의 군종을 창설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달 표면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 시켰으며 우주정거장에 유인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도킹시키는 한편,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 소련의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하고 미국의 GPS체계에 대응하는 GLONASS시스템을 완성하는 등 미국 독주의 우주개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일찍이 1950년대에 우주개발을 시작한 일본은 과거 우주의 평화적 개발을 폐기하고 우주의 군사적 개발을 본격 진행하여 우주작전부대의 창설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무인우주선 SLIM을 달에 착륙시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우주개발에 있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2023년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페이로드를 궤도에 정상 진입시킨 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의 당사자들의 경쟁적 우주 개발은 강성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우주개발의 길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우주개발의 과거와 현재

북한의 우주개발에 대한 언급이 최근 매체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주개발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긴 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그것이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발사 이후 우주 공간에서의 작동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우주개발 능력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발사체 분야에는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우주개발에 필요한 발사능력과 장비를 궤도에 진입시키고 운용할 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3년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자극 받아 진행한 2회에 걸친 발사 실패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2023년 11월의 만리경1호의 발사도 성공하였다고는 하지만,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에도 북한은 2개의 위성을 추가적으로 쏘아 올린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이 당장 위협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발사 기술과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라도 위협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우주개발 전망

북한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고질적 가난에 더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의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있으며, 더군다나 최근의 코로나 펜데믹은 북한의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우주개발을 통한 충분한 여력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과학기술 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범사회적 열풍은 우주개발을 함에 있어 인적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향후 우주개발에 관심을 갖고 매진해야 할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이미 잘 갖추어진 미사일 발사능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미래 첨단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첨단 우주개발을 통해 일인 독재자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궁핍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주민들의 사상이 완 방지와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현재 달아오르고 있는 동북아 지역 우주경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변 국가들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을 홀로 감내해야 하며 이에 정권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예상되는 행동으로 우선, 현재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 및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기획에서 운용, 지원체계를 아우르는 한편 이를 위한 당 차원의 규범적 정비를 하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조치로서, 인공위성을 안정적으로 발사하고 정상궤도에 안착, 군사임무 수행이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자 기술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세 번

째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우주 무기화에 중점을 두고 우주기반요격시스템, 대 위성 요격체계 등을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 자세

북한은 그동안의 축적된 미사일 발사 기술을 바탕으로 동북지역의 우주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불안한 경제능력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러시아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하시라도 도울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도 우주개발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이에 대한 실행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주분야 관련 전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함과 동시에 관련 법적 및 제도적 정비 등 국가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생태계 지원 및 인재육성 등 여러 관련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우주 분야의 안보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활동에 진력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미 우주영역을 담당하는 우주군을 창설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에 맞춰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시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연합 우주작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동북아 지역에 강력한 억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의 우주개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및 중국이 북한의 우주개발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의 연계시켜 그들의 노력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